

서울시, ‘BTS 컴백’ 발 맞춘다… 예방중심 안전관리 강화

내달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예정
市, 세계 팬 위한 축제공간 조성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 단속
오세훈 시장 “관광도시 서울 각인”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으로 전 세계 아미(ARMY)의 서울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한다.

서울시는 4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하에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글로벌 팬 환대를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전문가 사전 자문을 통해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강화하고, 메인 행사장 구역을 세분화해 취약 관리지역이 발생하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BTS 컴백 프로젝트 관련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주최 측에는 인파 규모 대비 충분한 안전지원 인력 배치를 요청한다.

인파 동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간도 시데이터와 CCTV를 활용해 실시간 인파 밀집도를 특별 관리한다. 경찰·소방·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위기 단계별 즉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공연 당일에는 시간대별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공연 전·후 병목구간 동선 관리로 순차적 진출입을 유도하고, 공연 중 인파의 쏠림 현상 방지 방안도 점검한다. 긴급 상황을 대비해 소방·응급 인력 및 차량을 배치하고 비상 동선도 확보한다.

행사장 일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도로 통제에 따른 버스 우회 등 교통 대책과 함께 주변 화장실 확보, 보행안전을 위한 따릉이 및 공유 PM 대여 중단, 불법 노점상, 불법주차 단속 등 현장 안

전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광장 무대 스크린과 전광판에는 다국어 안전 메시지를 송출해 외국인 방문객 안전도 챙긴다.

방탄소년단 컴백 기간을 전후해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숙박업소 요금 게시 준수 여부, 예약취소 유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국가유산청 방탄소년단 공연 조건부 허가(1.20) 직후 서울시는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합동으로 광화문 인근 호텔 4개소를 현장 모니터링했으며, 종로·중구와 합동으로 숙박업소 22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요금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온라인 여행사(OTA) 간담회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 수요 분산을 위해 종로·중구 외 숙박 밀집 지역을 비짓서울 누리집에서 홍보한다.

전통시장과 관광 밀집 지역에는 ‘미스터리 쇼퍼(암행 점검원)’를 활용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거

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자치구, 중소기업부, 서울상인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인 대상 위생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상인회 주도의 캠페인과 자정 활동을 병행한다.

시는 서울 전역을 축제 공간으로 꾸며 글로벌 팬 체류 경험을 확대한다. DDP, 서울광장, 한강공원 등 주요 거점에서 거리공연과 랜덤탄스 페스티벌, 참여 이벤트를 운영하고, 인접 상권과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한강버스 등 서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전 세계 아미(ARMY)와 시민을 위한 특별 체험 이벤트도 준비해 다채로운 서울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이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서울이 ‘글로벌 문화 수도’로서의 매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인파 안전, 바가지요금, 즐길거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챙겨 전 세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인천시,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종합 지원

경영환경개선·재무코칭 등 사업 추진

인천광역시시는 경기 둔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3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위기·재도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소공인 혁신성장, 금융취약계층 회복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 골목창업 첫걸음 지원사업’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색간판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점포 환경과 위생·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역방송과 연계한 판로개척 사업 등을 추진해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및 매출발 지원 사업을 확대해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비용을 지원하고, 기술훈련과 건강검진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재도전을 뒷받침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권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권 브랜드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상권 진단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브랜드북 제작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채무 상담과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워크아웃 등을 지원하고, 재무 코칭과 금융 교육을 병행해 금융 자립을 돕는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교육부, 전문대 ‘AID’ 지원… 240억 투입

(AI+Digital)

공모 통해 24개 내외 사업단 선정
지역기반 AI·디지털 교육거점 육성

전문대학이 기존 직업교육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을 교육 전반으로 확장하도록 정부가 총 24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교육부는 4일 이를 뒷받침할 ‘2026학년도 에이아이디(AID, 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문대학을 지역 기반 AI·디지털 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해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재직자까지 전

문대학에서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단위에서 AI 역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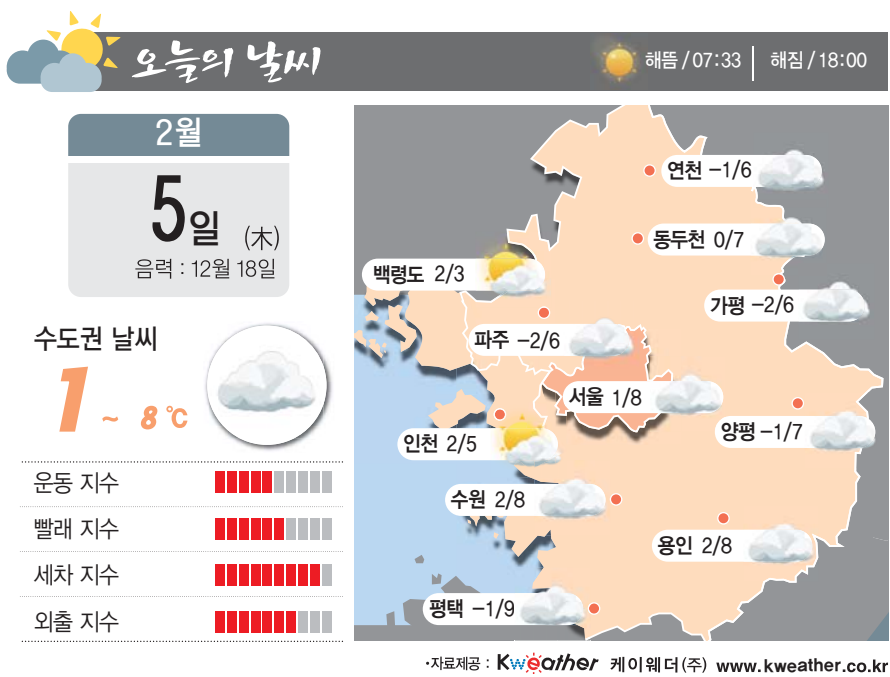
교육부는 2026년 신규 사업 공모를 통해 총 24개 내외 사업단을 선정하고 사업단별 최대 10억원, 총 2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환경 조성 ▲재학생·교직원·지역주민 맞춤형 인공지능 역량 강화 ▲대학별 특화모형 구축이다.

참여 대학은 지역 산업과 대학별 강점을 결합한 ‘AI·DX 특화 모형’을 구축한다. 대학별로 ▲학과구조 개선 ▲

데이터 기반 학생 지원 ▲산학협력 교육 △학사제도 유연화 등 필요한 모형을 자율 선택할 수 있다. 경진대회와 공모전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해 전문대학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확산할 계획이다.

최고전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이 필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재직자를 아우르는 평생직업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 스페인,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디지털 무법 지대서 아이들 보호”
- ▲ 日총선 후보자 55% 헌법개정 “찬성”…‘자위대 규정 고쳐야’



- ▲ 빌게이츠→엡스타인 ‘성병 항생제 요청 파문’…前배우자 “끔찍한 슬픔”
- ▲ 일본서 기록적 폭설에 8개 지역에서 30명 사망…부상자 324명

/사진 뉴스시

- ▲ “트럼프, 바이든보다 일 못한다” 여론조사 첫 역전
- ▲ 디즈니 신임 CEO, 테마파크 이끌던 ‘조지 다마로’ 선임